
정책참고자료

2017-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중앙-지자체 간 상황정보 공유로 상황관리 강화	4
---------------------------	---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지난 3년간 고충민원 권고 84.7% 수용”	9
----------------------------------	---

3 기획재정부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공급 확대방안 추진	15
-----------------------------	----

4 교육부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학교 성과보고회 개최	19
-----------------------------	----

5 미래창조과학부

300개 ICT 유망 창업·벤처기업, 제2기 「K-Global 300」 으로 선정	33
---	----

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2016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43
------------------------	----

7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 대책 추진	46
-------------------------	----

8 환경부

2017년 새로운 ‘통합환경관리’ 가 시작된다	56
---------------------------	----

9 고용노동부

중장년, 열정과 노력으로 다시 잡(job)았다 _____ 64

10 여성가족부

2017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_____ 67

11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17.1월부터 시행 _____ 71

12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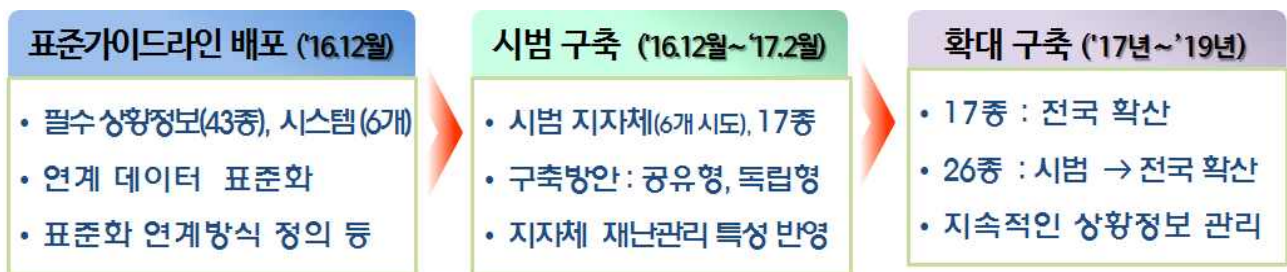
설 명절 앞두고 정부 비축 수산물 7,200톤 방출 _____ 74

중앙-지자체 간 상황정보 공유로 상황관리 강화

- 지자체 상황실 정보시스템 구축 시 표준화 가이드라인 준수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중앙과 지자체(시·도, 시·군·구) 상황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년부터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표준화 가이드라인은 시도 고유의 독립적 상황관리 특성을 유지하면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지자체 상황실 간 재난상황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단일화된 상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 * 사례(대전) : 갑천 상류 인근 지자체(금산·옥천) 우량·수위 상황정보 공유요청
 - 더불어, 중앙의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에 있다.
 - * 사례(전북) : 자체 GIS기반 운영시스템 구축, 타 기관 재난정보 연계 등 7억 절감
-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재난상황관리에 필요한 관측장비, CCTV, 사고 속보 등 필수 정보 43종, 6개 주요 시스템을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2017년 6개 시·도를 시범구축 운영한 후, 2019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중앙과 지자체간에 표준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 * 시범 6개 시도 : 부산, 대전, 전북, 경기, 제주, 울산 (일부 시군구 포함)

〈 단계적 표준화 추진 계획 〉



○ 아울러, 기존 지자체 상황정보에 대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개선
(공유한계) 지자체 관측정보 및 CCTV 등제조사별로 연계표준이 없거나 상이	중앙-지자체 간 공유가 필요한 상황정보 43종을 표준화하고, 상호 연계표준 마련
(개별운영) 지자체 상황실에 관측CCTV 등 단위시스템은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통합관리는 미흡한 편	시도는 시군구 시스템을 통합하고, 통합한 시도 정보시스템은 중앙의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과 연계
(컨텐츠 불균형) 중앙의 'GIS기반 통합 상황관리시스템'은 지자체 컨텐츠 부족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상황관리 기능은 미흡	단일화된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도, 시·군·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상황정보 표출

- 이처럼 중앙-지자체 간 단일화된 상황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인접 지자체의 상황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지금보다 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더 큰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상황정보 표준화는 종합적으로 국가 재난정보체계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의미가 크다.” 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지자체 간 상황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자체 상황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 추진 목표 구성도 >



□ 「상황정보 표준화 가이드라인(지침)」 개요

- 제정목적 : 중앙 ↔ 시도 ↔ 시군구간 재난상황정보 공유
 - 지자체에서는 재난상황실 정보시스템·장비 등을 도입·구축할 때는 이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 상호 정보공유하여 공동 활용
- 공유방법 : 표준화된 상황정보는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에 표출하여 중앙-지자체 간 공유

< 중앙-시도-시군구 상황정보 표준화 대상(43종) 및 공동이용 개념도 >



구분	상황정보 (43종)	시군구	시도	중앙
합계	소계 (○ 정보 생성 / ◎ 공동이용)	28/15	19/24	21/22
GIS기반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중:9종, 소:32개)	• 상황속보정보(4), 상황위치정보(4), 상황관리정보(3), 영상정보(3), 자원관리정보(3), 119 소방영상(4)	○	○	○
	• 중앙재난문자발송(3)	◎	◎	○
	• 재난CCTV 통합연계(4), 현장이미지 정보(4)	○	○	◎
관측시스템 (중:12종, 소:38개)	• 우량(3), 수위(3), 적설정보(3), 자동기상정보(3), 지진가속도계정보(3), 풍향 풍속정보(3), 대기정보(3)	○	◎	◎
	• 수질 정보(3)	○	○	◎
	• 급경사지정보(3), 댐수위, 홍수정보(4), 환경정보(4), 교통 정보(3)	◎	◎	○
영상(CCTV)시스템 (중5종, 소:20개)	• 지자체 CCTV 정보(4), 현장영상 정보(4)	○	○	◎
	• 시군구 재난외 CCTV (4)	○	◎	◎
	• 시도재난외CCTV(4)	◎	○	◎
	• 중앙재난외CCTV(4)	◎	◎	○
지도시스템 (중:7종, 소:14개)	• 지자체 위치 정보(2), 지자체 지도 정보(2)	○	○	◎
	• 산사태위험지구(2)·재해위험지구정보(2), 가뭄영역정보(2), 대규모공사장정보(2), 실시간 조류방향지도정보(2)	◎	◎	○
예·경보시스템 (중:5종, 소:15개)	• 자동음성안내 (3), 재해전광판(3), 재난방송(3)	○	◎	◎
	• 재난문자발송(3), 경보시스템(3)	○	○	◎
기타 재난관리 시스템 (중:5종, 소:19개)	• 현장지휘정보(4)	○	○	◎
	• 119 상황정보(5)	○	○	○
	• 112 상황정보(3)	◎	○	○
	• 산불 정보(4), 재해예측 정보(3)	◎	◎	○

① 중앙·지자체 공유형 : 울산 남구



중앙의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공동활용하는 유형으로 상황판에 관내 사고속보, 관측·CCTV 정보 등이 표출되고, 인접지역에 수위·우량 등 상황정보 조회

② 독립형 : 부산광역시



지자체에서 별도의 상황관리시스템을 기 구축한 경우로, 자체 시스템을 유지 하되 중앙과 상황정보를 연계하여 중앙의 사고속보 등을 수신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황정보 조회

국민권익위, “지난 3년간 고충민원 권고 84.7% 수용”

수용 우수기관은 국가보훈처, 경기 고양시,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25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679건 중 84.7%인 1,422건이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한다. 따라서 민원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서는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야 한다.

< 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현황 >

('13.10.1~'16.9.30)

구분	권고사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계	1,679	1,422	84.7%
시정권고	677	592	87.4%
의견표명	1,002	830	82.8%

- 권고 수용률 95% 이상 우수 기관은 국가보훈처(100%), 경기 고양시(100%), 국민연금공단(100%) 등 7개 기관이며 80% 미만은 경기 성남시(50.0%), 한국농어촌공사(66.7%), 근로복지공단(67.3%) 등 8개 기관이다.
-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87.0%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각각 83.4%와 83.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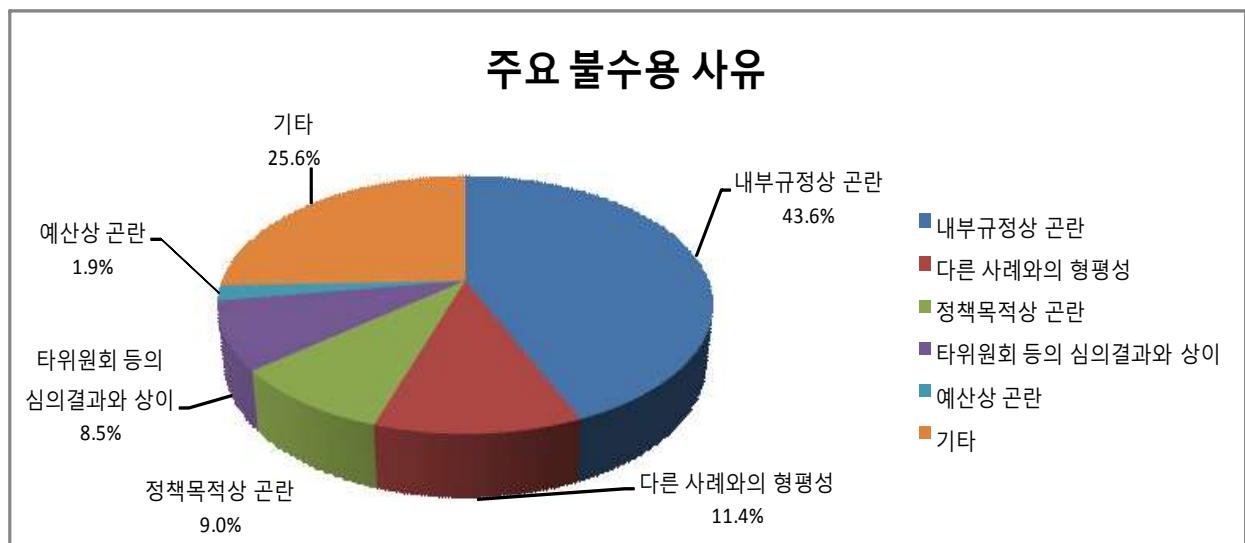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권고사항 수용 현황 >

('13.10.1~'16.9.30)

구분	권고사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계	1,679	1,422	84.7%
중앙행정기관	705	613	87.0%
지방자치단체	500	417	83.4%
공직유관단체	442	367	83.0%
기타	32	25	78.1%

※ 기타 : 교육청, 법인, 재건축조합 등

- 수용되지 않은 권고사항 211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내부규정상 곤란'이 43.6%(92건)로 가장 높으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11.4%(24건), '정책 목적상 곤란' 9.0%(19건)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이 수용한 우수 사례로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민간구급차 운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해당 병원장이 인정한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과태료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경찰청이 '과태료 긴급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내용을 다른 경찰기관과 공유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불수용 사례로 ‘훈련사이트(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아 직업능력 훈련장려금 지급이 거절되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성실히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실비변상 성격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라는 의견표명을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 6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4건의 의견표명을 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위반 등의 사유로 불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 등 유관기관들과 「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우수 기관 수용 현황(7개 기관)

연번	구분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수용률
1	중앙행정기관	방위사업청	15	15	100.0%
2	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처	14	14	100.0%
3	공직유관단체	국민연금공단	12	12	100.0%
4	지방자치단체	고양시	12	12	100.0%
5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116	114	98.3%
6	공직유관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53	51	96.2%

붙임 2. 미흡 기관 수용 현황(8개 기관)

연번	구분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수용률
1	지방자치단체	성남시	10	5	50.0%
2	공직유관단체	한국농어촌공사	15	10	66.7%
3	공직유관단체	근로복지공단	52	35	67.3%
4	공직유관단체	한국수자원공사	16	11	68.8%
5	중앙행정기관	산림청	16	11	68.8%
6	지방자치단체	남양주시	12	9	75.0%
7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69	54	78.3%
8	중앙행정기관	국세청	217	172	79.3%

붙임 3. 수용 우수 사례

피신청인	내 용
경찰청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부득이한 교통위반 처벌 취소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부득이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경우 관련 입증을 파악하여 과태료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원개요) ○신 청 인 이 ○ ○(2AA-1604-226125) ○피신청인 대구성서경찰서장 ○시정권고 2016. 5. 30. ▸ 민원요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68km지점의 제한속도가 100km/h임에도, 신청인이 2016. 3. 17. 해당 지점 1차로에서 그랜즈스타렉스 구급차를 141km/h로 운행한 것이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어 2016. 5. 9.자 11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 위반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불가피한 위반이므로 특례를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서는 이송한 환자가 응급환자라고 입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았기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① 신청인이 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시 ‘환자진료(후송)증명서’ 등 응급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개인 정보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의 확인 없이는 발급이 곤란한 ‘의료기록’을 ○○병원장에 요구하여 발급이 거절되자 응급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점, ②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병원장이 이송환자에 대해 ‘급성의식장애 및 ‘급성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인한 ‘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응급실로 이송한 다음날 사망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 피신청기관의 적극적 수용 시정권고 이후 피신청인은 ‘과태료 긴급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2016. 7. 7)하였고, 관련내용을 언론에 홍보하고 경찰청 본청을 통하여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

붙임 4. 주요 불수용 사례

피신청인	내 용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장려금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 훈련사이트(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에는 실비변상 성격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원개요) ○신 청 인 조 ○ ○(2AA-1602-095318) ○피신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의견표명 2016. 3. 28.
	▶ 민원요지 신청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학원에서 취업교육을 수료했는데, 14일 이내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에 수강평 입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훈련장려금(교통비 및 식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훈련 수료생의 수강평은 훈련기관 평가에 활용되고 훈련 희망자들의 훈련기관 및 과정 선택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함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취지는 ‘성실한 훈련수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의 제도개선 등을 위한 수강평 입력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6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행정규칙에서 훈련장려금 지원제한 기준을 수강평 입력 여부와 연계하여 규정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신청기관에 훈련장려금 지급을 의견표명 ▶ 피신청기관 불수용 사유 2014. 6. 동일사례에 대한 의견표명시 관련 규정을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했음에도, 피신청인은「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의 효력이 있다며 훈련 장려금 지급을 불수용 ※ 2014년 이후 동일한 사례에 대한 의견표명 4건 권고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공급 확대방안 추진

- 정부는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발표(‘16.12.23일, 농림축산식품부) 이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AI 관련 민생물가·수급대응 TF」를 통해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
- 그동안 계란 수요·유통업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임
- 이를 통해 계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 명절 수요에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1.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1월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

* 할당관세(관세법 §71) : 국내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총 9.8만톤)이 1월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짐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구 분	계란		노른자		전란*		난백알부민**	
	신선	조제	가루	액(液)	가루	액(液)	가루	액(液)
기본세율(%)	27	27	27	27	27	30	8	8
할당세율(%)	0	0	0	0	0	0	0	0
적용물량(천톤)	35	3.3	0.6	12.4	2.6	28	1.3	15.3

* 껍질이 제거되고 노른자를 제외한 나머지(흰자 또는 흰자+노른자)

**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

-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 지난 12월 23일 발표한「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추진되었으며,
 - 금년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1.5일, aT)를 개최하여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1월6일 발표할 예정임 (농식품부)

* 수입시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도 1월6일 함께 발표예정 (농식품부)

2.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원활한 수입 지원

【 수입절차 신속 처리 】

- (수출작업장 등록)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

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기로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 그동안 신선란 수입이 없어 등록된 계란 해외 수출작업장이 없음

- (검역·위생증명서 마련)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농식품부, 식약처)

- (검역·검사)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진행을 위하여 수입시 검역(1~3일내, 농식품부), 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 식약처) 등 관련 절차를 단축(검역·검사 동시 진행)하고,

- (통관지원)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공휴일·야간 포함) 및 검역·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하기로 함 (관세청)

【 수입대상국 확대 】

- (전란액 수입선 확대)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기허용된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 (식약처)

* 현재 전란액 수입가능 국가(식약처 지정) :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

- 이와 더불어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시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 절차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 이후 착수가 가능한 바, 재외공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국 정부와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임 (외교부)

【 계란 수요업체 지원 】

- (정보제공) 그동안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애로를 겪는 수입업체를 위하여 aT가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1월6일 aT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구축하여 계란 등 수입 가능국가, 등록 수출작업장 정보, 수입 위생증명서 협의 여부 및 각국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 (중소업체 지원) 또한, aT는 자체 수입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물량 확보 및 수입절차 컨설팅 등 수입과정 전반을 지원할 계획임

3. 계란 유통 원활화 지원

- (공급조치) 정부는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농협 등)하고,
 - 방역조치로 인한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편승인상 등 감시) 정부는 계란값 인상에 편승하여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여(농식품부, 식약처, 공정위, 지자체 등 / 1차 '16.12.26일~28일, 2차 1.2일~13일)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것임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학교 성과보고회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진로고민, 월~ 월~” >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2월 22일(목), 서울 더 케이 호텔에서 전국의 300여 개 초·중등학교 교장, 진로전담교사 등이 모인 가운데, ‘2016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학교 성과보고회’를 갖는다.
 - 이번 행사는 진로교육의 발전 및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교원을 격려하고, 진로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이 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사례,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초·중등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진로 교육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 ‘15년 「진로교육법」 시행(‘15.12.23)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16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올해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도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시범·협력학교를 운영*하면서 연구와 동시에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 도입 현황 : 연구학교(37교), 시범학교(55교), 협력학교(300교)
- 연구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등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고, 자기이해 중심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교과연계 진로교육 운영 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다.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교과통합 주제수업, 체험활동 중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진로인식’이라는 성취목표를 달성에 노력하였다.

- 서울우장초는 학년군별 진로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로집중 주간을 운영하였고, 인천굴현초는 학생 진로목표성취도 조사와 연계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통합형 수업을 추진하였다.
 - * (1~2)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 (3~4) 자기 및 직업세계 이해 → (5~6) 진로탐색 로드맵 찾기
- 대전삼성초는 창의적 체험활동 전체 시수의 40%(연간 40시간 내외)를 '진로활동'에 편성하고, 지역자원 연계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 중·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성취목표는 각각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로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전후 연계를 위한 진로교육 실천 방법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광석중은 자유학기 선행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1학년 평가방법*을 개선하였고, 자유학기 후행형인 장기중은 2학년을 진로집중 학년으로 설정하여 전 교원이 참여하는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추진하였다.
 - * 중간고사는 기본교과(6과목)만 최소화하여 시행, 교과목 연계 진로탐색 수행평가를 모든 교과에 적용
 - 범박고는 학생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의 도입·적용 및 지역연계 클러스터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교과별 진로탐색 권장도서 활용 수업을 전 교과에 적용하였다.
 - * 점프업(Jump-up) 과정, 비진학 학생을 위한 기술교육 과정, 미래의 꿈을 키우는 대안교실 등

< 연구학교 참여 소감 >

◦ **“내가 알고 있던 직업보다 더 많은 직업이 있었어요!”** (대청중학교 학생 소감)

언더라이터라는 직업은 피보허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약의 체결 여부, 가입조건 등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 매우 호기심이 갔고 계약자와 회사에게 청약을 하면 회사가 계약자에게 승낙을 하는 순환 과정이 신기했다.

내가 생각한 경제인의 내용은 아니었기에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경제인이란 직업 안에 많은 관련 직업이 있어서 내가 강의로 배운 직업 외에 다른 것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직업 선택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상중학교 학생 소감)

저는 강연을 통해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는 생각에 변화가 생겼어요. 제 꿈인 기자가 되더라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직업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 **“진로 고민, 친구와 나누며 월~월~ 털어버려요!”** (범박고등학교 학생 소감)

‘진로와 직업’ 시간에 검사했던 흔랜드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영어 수업시간에 제 적성에 맞고 흥미를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고, 수학 시간의 ‘집합’ 수업에서는 개개인이 좋아하거나 관심있는 직업을 찾아 모둠친구들과의 교집합, 여집합 등을 찾아내며 서로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뿐 아니라 친구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 **“진로연계 수업, 수학이 쉽고 친근해 집니다.”** (범박고등학교 수학교사 소감)

처음에 고교통합 진로연계 수업을 설계하고자 했을 때는 어느 단원에 어떤 활동으로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사협의회 논의과정을 통해 집합 단원(직업들 간의 공통점), 함수 단원(함수대응과 압호 해독을 통한 정보보안전문가 알기)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같은 교과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은 수학을 더 이상 어렵고 지루한 과목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협동학습 기반으로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학생 진로목표성취도 조사* 결과, 초등학교는 3.83점에서 4.14점으로, 중학교는 3.62점에서 4.17점으로 각각 0.31점, 0.55점이 상승하였다.

* 4개 성취영역(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에 대하여 사전(4월), 사후(10월)에 Likert 척도(5점 만점)로 조사

○ 한편, 학교급별로 가장 많이 상승한 진로목표성취도의 성취영역*은 해당 학교급에서 추구한 성취목표와 일치하여, 연구학교가 성공리에 추진되었음을 지표로서 보여주고 있다.

* (초등학교 : 진로인식) ‘진로디자인과 준비’ 영역에서 0.65점 상승
(중학교 : 진로탐색)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영역에서 0.64점 상승

-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는 초·중학교에서 4.1점이 넘었고, 고등학교도 3.6점을 초과하는 등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학생/학부모 : (초) 4.34점/4.32점, (중) 4.13점/4.14점, (고) 3.69점/3.66점

- 그리고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학교 운영담당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학교는 진로상담에 기초한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의 자신감, 자기 주도성 등을 높여주어,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며 학습동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 진로교육에 기초한 교과 연계 및 통합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편성·운영되고,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협력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커리어넷(www.career.go.kr) 등 플랫폼 기반의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인재가 요구될 것이며, 이러한 인재양성에 대한 해답이 진로교육임을 37개 연구학교의 성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또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 녹아 들어가야 하고, 모든 교사가 전문가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교육부는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 개요

- 추진 목적 : 진로체험 교육과정 집중 운영을 통한 학생의 진로설계 역량 강화
- 개념 :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진로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체험 교육과정 *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체험이나 탐색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
 - ※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근거 : 「진로교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진로교육법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추진 방법

- 추진 시기 : 초6, 중1.2.3, 고1 과정 중 특정 학년 또는 학기
- 추진 방향
 - 학생의 요구 및 학교·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특색 있게 운영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진로 관련 교과**의 집중 편성 및 일반교과와 연계한 진로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비중 확대 등 권장

* 창의적 체험활동의 구성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 진로관련 교과 : (초등) 실과, (중등) 진로와 직업

-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해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체험 등의 다양한 진로활동 제공

□ 운영 모형[안]

○ 초등학교 : 창체활용형, 교과연계형

※ 창체 활용형 수업시간 편성 · 운영(6학년 예시)

교시	진로교육 집중학기					
	월	화	수	목	금	토
1~4	기본교과 운영					필요에 따라 전일제 진로체험 또는 진로캠프 운영
5	교과연계 (영어: My Father is a pilot)	진로활동 연계 창체 (진로동아리)	진로관련 교과(실과)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체험)	진로활동 (진로검사 및 상담)	
6						
7						
방과후	진로활동 연계 방과후학교					

○ 중학교 : 자유학기선행형, 자유학기통합형, 자유학기후행형

※ 자유학기후행형 수업시간 편성 · 운영(2학년 예시)

교시	자유학기 (2학년 1학기)					진로교육 집중학기(2학년 2학기)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1~4	기본 교과					기본교과 진로동아리	기본교과	기본 교과	기본교과	기본교과	
5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교과연계 (국어: 윤동주)	진로활동 (진로체험)	기본교과 진로와 직업	교과연계 (음악: 클래식)	
6											
7											
방과후	'자유학기 활동' 연계 운영					진로활동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적 편성					

○ 고등학교 : 집중학년형, 집중학기형

※ 진로탐색형 수업시간 편성 · 운영(1학년 예시)

교시	진로교육 집중학기				
	월	화	수	목	금
1~4	기본 교과	기본 교과	기본 교과	기본 교과	기본 교과
5			진로활동 연계 창체 (진로동아리)		
6	교과연계 (사회: 창업)	교과연계 (과학: 만유인력)		진로활동 (진로체험)	진로와 직업
7					
방과후	진로 활동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적 편성				

□ 개요

- 목적 :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기회의 집중 제공
- 추진 경과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모델 개발 연구('15.9~12)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컨설팅**('16.3~'17.2)
 - * 참여 학교 수 : (연구학교) 37교, (시범학교) 일반고 1학년 대상 55교, (협력학교) 300교
 - ** (1차) 전체학교 대상 합동 컨설팅('16.3), (2~3차) 개별학교 방문 컨설팅('16.5~11)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학교 성과보고회('16.8)
 - '16 행복교육박람회 중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세미나 개최('16.10)

□ 운영 과정

- 운영 과정
 - 운영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초·중·고 매뉴얼(안)을 활용하여 일반화 모형 도출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컨설팅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컨설팅단(22명)을 구성하여 현장 지원
- 일반화(확산) 과정 : 연구·시범학교 성과보고회 및 자료집 발간
 - ※ (연구학교) 보고회 및 자료집('16.12) / (시범학교) 보고회('16.8), 자료집('16.9)

□ 시도교육청별 운영 학교 수

(단위 : 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연구학교	2	2	2	2	3	2	2	0	4	2	2	3	0	3	3	5	0	37
시범학교	7	3	2	3	2	1	1	1	11	3	2	3	3	3	5	4	1	55
협력학교	34	16	11	13	8	8	6	2	59	17	12	18	20	21	25	25	5	300
계	43	21	15	18	13	11	9	3	74	22	16	24	23	27	33	34	6	392

□ 연구학교 현황(37교)

연번	시도	학교명	연구주제
1	서울	서울우장초등학교	D(Desing It) · D(Do It) · D(Dream It), 3D 입체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개발역량 함양
2	서울	노곡중학교	중학교 진로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 연구
3	부산	대청중학교	자유학기 통합형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을 통한 진로개발 역량 강화
4	부산	부산고등학교	개인 맞춤·집중형 진로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5	대구	대구서평초등학교	학년교과 재편형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능력 향상 방안
6	대구	새본리중학교	집중 학기제를 통한 자유학기제 선행형 진로교육
7	인천	인천굴현초등학교	진로중심꿈 知樂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개인 맞춤형 진로개발역량 신장
8	인천	부흥중학교	진로 중심의 꿈·희망 지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진로탐색역량 신장
9	광주	동곡초등학교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적용·확산을 통한 진로개발역량 함양 연구
10	광주	정암초등학교	진로개발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진로인식 능력 신장
11	광주	비아중학교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탐색과 진로 역량 강화
12	대전	대전삼성초등학교	진로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신장 방안
13	대전	대전두리중학교	자유학기제 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역량 강화 방안
14	울산	동천초등학교	「꿈을 향한 몸짓」 진로디자인(D-Sign)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진로개발역량 함양
15	울산	옥현중학교	교과통합 진로 교육과정 모형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진로설계 역량 강화
16	경기	고창초등학교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체험형 진로 역량 신장
17	경기	선부초등학교	「꿈 공동체 Dream Up 프로젝트」 진로중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개발역량 신장
18	경기	장기중학교	진로교육 집중 학년제 운영을 통한 학생 맞춤형 생생 진로교육 방안
19	경기	범박고등학교	3C 교육 활동에 바탕을 둔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
20	강원	창촌초등학교	커리어앵커 기반 교실속 진로찾기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인식 능력 신장
21	강원	김화여자중학교	농산어촌 학교 학생 맞춤형 SCEP 운영을 통한 진로탐색 능력 신장
22	충북	무극초등학교	DREAM STAR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개발역량 강화
23	충북	주성중학교	진로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 능력 신장
24	충남	신례원초등학교	진로교육 강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진로개발역량 함양
25	충남	탕정미래초등학교	4色 꿈길여행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탐색 능력 향상 방안
26	충남	광석중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을 통한 창의적 진로개발능력 함양
27	전남	순천왕지초등학교	3 STEP 꿈나래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설계 역량 키우기
28	전남	영광중앙초등학교	「D.V.D.」 꿈틀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인식능력 신장 방안
29	전남	무선중학교	진로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진로의사결정능력 신장
30	경북	군위초등학교	융합형 진로 강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맞춤형 진로설계 역량 함양
31	경북	후포초등학교	진로중심 학교교육과정 ‘세(3)움’모델 개발을 통한 맞춤형 진로설계역량 옹호하기
32	경북	신상중학교	진로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개발능력 향상
33	경남	우암초등학교	진로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창의적 진로개발역량 신장
34	경남	진목초등학교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세(배움, 키움, 채움)움」 모델 개발 및 적용
35	경남	충무초등학교	해오름 드림비전 교육과정을 통한 미래설계역량 강화
36	경남	소가야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인식 함양
37	경남	한다사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인식능력 함양

□ **조사 개요** : 양적 데이터 및 질적 데이터 조사 병행

○ 양적 조사 : (학생) 진로목표성취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 4개 성취영역(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에 대하여 사전(4월), 사후(10월)에 Likert 척도(5점 만점)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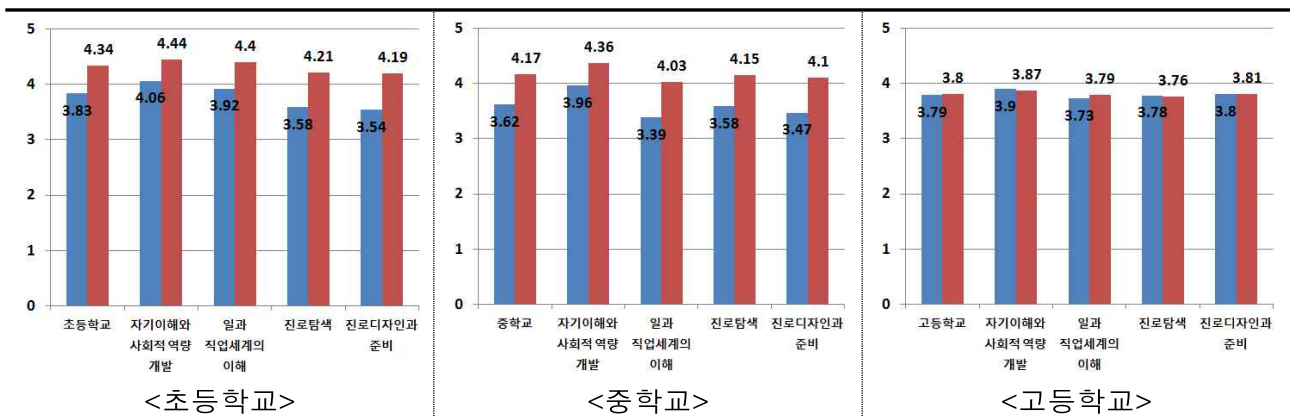
○ 질적 조사 : 참여 학생 소감문 및 교사 인터뷰를 통한 학생 변화 분석

□ **조사 결과**

○ 학교급별로 진로목표성취도 조사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3.83점에서 4.14점으로, 중학교는 3.62점에서 4.17점으로, 고등학교는 3.79점에서 3.80점으로 각각 0.31점, 0.55점 및 0.01점으로 상승하였다.

- 학교급별로 차이는 있으나 '진로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진로디자인과 준비(0.65점 상승)', '진로탐색'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학교는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0.64점 상승)'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연구학교 참여 학교급별 학생 진로목표성취도 조사 결과>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모든 학교급에서의 만족도가 3.6이상*으로 나타나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생/학부모 : (초) 4.34점/4.32점, (중) 4.13점/4.14점, (고) 3.69점/3.66점

□ **초등학교(서울우장초)**

- 연구주제 : 3D* 입체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개발역량 함양
 - * 3D : Design It(진로교육 꿈터 가꾸기), Do It(나의 꿈 경험하기), Dream It(나의 꿈 찾기)
- 집중운영 유형 : 교과통합(연계), 동아리, 진로체험 중심
- 주요 실천 내용
 - 1단계(Design It) : 교육 환경 디자인, 교육과정 디자인, 교사* 및 학부모 진로역량 강화 디자인
 - * 교사 공모 기반의 맞춤형 연수 도입, 동학년 담임 중심의 7개 수업 동아리 운영
 - 2단계(Do It) : 진로교육 집중 교육과정 편성, 6학년 대상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 * 교과연계 진로교육 시수 45시간 및 창의적체험활동 58시간 편성·운영
 - 3단계(Dream It) :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꿈 찾기 활동
 - * 강서구청, 강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한 마을 팟캐스트 만들기 등 추진
- 특색(우수) 사례 : 가족 동행형 학생 진로 설계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진로동행 프로젝트* 등 운영
 - * 우장 달빛 별빛 축제, 우장 가족 걷기 축제, 우장 달빛 독서 콘서트 등
 - ** 대학생 교육기부 활동인 합성소리를 통한 연극놀이 활동 동아리 운영
- 주요 성과 : 학교 구성원 중 특히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진로 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동참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기틀 마련
 - *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학부모 스토리텔러단, 학부모 독서토론반, 세계음식만들기 동아리 등 운영



□ 중학교(대청중)

- 연구주제 : 자유학기 선행형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을 통한 진로개발역량 강화
- 집중운영 유형 : 교육과정, 동아리, 체험활동 중심
- 주요 실천 내용
 - 교육협의회를 통한 교과별 진로교육 요소 추출 및 교과통합 진로 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

과목	단원	교과 성취기준	진로 성취기준
기술·가정	3.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	가9121-1. 아침 결식 등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2015-MIII 2.2.2 관심 직업분야의 다양한 진로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미술	5. 미술과 함께하는 직업	미9121-2. 현대 사회의 시각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역할과 기능을 안다.	2015-MII 2.1.2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를 관심 직업과 연결 지어 그려볼 수 있다.
영어	Lesson 3. Taste the World	영중9332.세계의 길거리 음식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2015-MI 2.1.2 다른 생각, 감정, 문화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과 진로활동을 연계한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지원

* 진로탐색 동아리 36개 조직, 매주 둘째 주 금요일 6, 7교시(연간 22시간) 운영

- 특색(우수) 사례 : 2학년을 진로교육 집중학년으로 설정*하여 각 교과별로 진로와 교과가 융합된 진로융합수업(2시간 이상) 운영

* (1학년) 자유학기제 → (2학년) 진로교육 집중학년 → (3학년) 진로상담 중심

- 주요 성과 : 집중학년(2학년) 운영 결과 ‘진로탐색’에 대한 진로목표성취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

* ‘내 미래의 모습과 관심 직업을 연결시켜 상상할 수 있다’가 연구학교 운영 전 2.9점에서 운영 후에 4.56점으로 1.66점 상승(전체 연구학교의 ‘진로탐색’ 영역의 평균 성취도 변화는 0.55점)



□ 고등학교(범박고)

- 연구주제 : 3C 교육활동을 통한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
- 집중운영 유형 :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통합(연계), 동아리, 진로체험 중심
- 주요 실천 내용
 - 교육과정 운영 : 지역협의체와 함께하는 클러스터 과정, 점프업 과정, 비진학 학생을 위한 기술교육 과정, 창의·문화예술 과정, 대안교실 운영
 - 교과통합 진로교육 :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과정 구안, 진로 연계 교과 체험의 날 운영, 교과별 진로탐색 권장도서 활용 수업
- 특색(우수) 사례
 - 인성과 진로탐색을 통합한 집단상담 활동에 기초하여 자기주도적 학생 진로설계 및 진로활동* 지원

* 'As is에서 To be로' : 1, 2학년은 '진로와 직업'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감정살피기를 통한 자기 돌봄 기회를 제공하여 인성교육과 진로교육 병행

- 진로중심의 교과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일반화

학년	교과	학습유형	교수 학습 주제	비고
1	수학	참여형, 발표형	- 암호만들기(역함수) - 암호관련 직업탐색(정보보호전문가)	
2	사회문화	협력과제형, 발표형	- NIE를 활용한 대중매체의 비판적 수용 - 대중매체에 관한 사설보드 만들어 발표하기	
2	영어	개별과제형	- 20년 후 나에 대한 가상의 자서전 쓰기 - 학습교재와 연계한 영어자서전 만들기	

- 주요 성과 : 교과통합 진로연계 수업에 대한 학생의 긍정 답변이 63%로 나타났고, 학부모 응답자의 64%가 연구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역량 개발이 향상되었다는 응답



붙임 5**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알아보기**

- Q1 :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라면,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전 학교급의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진로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 학생들의 평생교육 및 생애진로설계적 관점에서 개인의 발달 및 특성을 고려한 진로상담에 기초하여 학교급간 연속성을 가지며 진로개발역량을 길러주는 제도임.
 - Q2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시범·협력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위해 운영한 학교
 - *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임.(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13.3.23시행)
 - (시범학교) 고등학교 진로전환기(1학년)의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운영 및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운영한 학교
 - (협력학교) 연구·시범학교의 다양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모형을 개발과 동시에 적용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한 학교
- ※ 시범학교 및 협력학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연구 유공 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님

- Q3 : 교육부는 진로교육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관리자, 담임교사, 진로 전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관리자는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진로교육 중심의 학교경영 등에 대한 연수를 집중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담임교사 연수도 추진하고 있음
- 진로전담교사는 중등교사의 경우 진로상담역량, 진로교육 설계 및 지원 역량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간 570시간의 부전공 연수와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지원하고 있음.
- Q4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진로상담을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평생교육 및 생애진로설계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길러주고자 하고,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매우 중요
- 진로상담에 기초한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 자기효능감 증진 등에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임.
-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이 삶과 직결됨과 동시에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증진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300개 ICT 유망 창업·벤처기업 제2기 「K-Global 300」 으로 선정
- 미래부 ICT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기업 집중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2월 30일(금),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분야 유망 창업·벤처기업 300개를 제2기 「K-Global 300」 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기업선정은 ICT 창업·벤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수립한 「ICT 창업·벤처 정책 통합·연계방안」 (‘15.3월)에 따른 것으로,
 -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ICT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미래부의 정책지원 역량을 결집하여 지원하기 위해 선정하였으며,
 - ‘15년에 선정된 제1기 「K-Global 300」 의 경우, 올해 상반기 동안 투자유치 1,009억원, 매출 975억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 제2기 「K-Global 300」 을 선정하기 위해 ICT 창업·벤처 지원사업(이하, 「K-Global 프로젝트」)을 담당하는 미래부 지원기관*의 지원 경험 및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 발굴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ICT 본투글로벌센터,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화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8개
- ‘14~’16년간 「K-Global 프로젝트」 를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고용창출, 해외진출 실적 등의 기업역량과 기업의 유망성 평가·검증을 통해 200개 기업을 선정하고,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검증을 거

쳐 100개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지역 소재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선정된 창업·벤처기업은 대전, 대구, 부산 등 비수도권 기업이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창업공모전 수상 및 투자유치 등을 받은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눈부신 성장이 기대된다.

* 美 테크 크런치 대회 수상(브레이브 팝스), 다국적 스타벤처 대상(이놈들 연구소), 엑셀러레이터 통합 데모데이 대상(눔), 투자유치(태글, 메쉬코리아, 마인즈랩) 등

- 「K-Global 300」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개별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입주 공간, R&D, 해외 IR, 컨설팅, 자금 등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부 창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한편,



- 해외진출 희망기업에게는 「K-Global@」 해외로드쇼 등을 통해 현지시장 정보공유, 투자자와의 만남기회 주선 등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부 정완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저성장 기조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벤처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이번에 선정된 제2기 「K-Global 300」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진출, 대규모 투자유치 등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제2기 「K-Global 300」 선정기업 리스트

□ 「K-Global 프로젝트」 지원기관 선정(200개社)

No	사업명	기업명	대표자	설립년도
1	K-Global DB-Stars	와탭랩스	이동인	2015
2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2015
3		플런티코리아	김강학	2015
4		텐큐브	이광진	2014
5		로아팩토리	이영준	2015
6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원스	김대연	2011
7		큐유아이	곽병재	2016
8		에이케이엔코리아	심혁훈	2015
9		바이다	김병성	2015
10		레클	정조균	2014
11		리얼감	정연우 오복성	2016
12		디케이에코팜	홍의기	2005
13		마인즈랩	유태준	2014
14		지노텍	방건동	2016
15		핀텔	김동기	2015
16		씨소	경동욱	2013
17		테크놀로지아	진대순	2015
18		아크릴	박외진	2011
19		이이알에스소프트	이종원	2015
20		오현미디어	오수현	2016
21		옴니씨앤에스	김용훈	2014
22		우원소프트(주)	안영훈	2008
23		울뉴시스템즈	신창섭	2016
24		시아인터페이스	임형준	2015
25		위포코퍼레이션	경규창	2015
26		이노넷	유호상	2011
27		지란지교소프트	오치영	2015
28		이그웨어	엄민영	2016
29		소프트자이온	이준호	2012
30		필드솔루션	김대천	2015
31		픽스타커뮤니케이션즈	최진한	2016
32		열사람 주식회사	홍상민	2012
33		소프트기획	박준호	2013
34		주식회사 알리	윤재민	2010
35	K-Global IoT 챌린지	클레프 이노베이션	구예림	2016
36		씨드앤	이득환	2015
37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	바이플러그 주식회사	최영석	2015
38		엠티비	지현민	2005
39		볼트홀	양승준	2014
40		모아데이터	한상진	2014
41		아이디어링크 주식회사	김종민	2012
42		아이랑놀이짱	손천강	2015
43		마녀의숲	신종수	2013
44		넥스비즈코리아	김동주	2014
45	K-Global Re-Startup	스토리지안	윤동구	2016

46	(패키지형 지원)	핑거앤	김민영	2015
47		브라운백커피	손종수	2015
48		글로벌코딩연구소	이창훈	2016
49	K-Global Startup 공모전 (일반부문/IoT신제품개발부문)	드림온	이승수	2014
50		에벤에셀케이	강미숙	2015
51		더블미코리아	유경성	2015
52		일리테크	안영준	2012
53		튜터링	김미희	2016
54		Aventures(어벤처스)	박진규	2015
55		페스카로	홍석민	2016
56		FITT	홍석재	2015
57		모글	박정은	2015
58		에이팀벤처스	고산	2013
59		코딩발전소	김희두	2016
60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	스마트비	이선준	2016
61		피지컬리	강태구	2016
62		루나소사이어티	장은경	예비창업
63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 지원	새롭게모바일	박지민	2016
64		알고리즘랩스	손진호	2016
65		더히소프트	박희경	2016
66	K-Global 빅데이터 Start-up 지원	스마트킹(주)	송문택	2015
67		익투스	서영준	2016
68		초록소프트(주)	김명락	2015
69	K-Global 선진글로벌 교육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박혜린	2007
70		엠클라우드에이피	강용석	2013
71		유니드컴즈	전형신	2014
72		아이유웰	송성근	2010
73		오픈트레이드	고용기	2012
74		샘웨어	김광진	2009
75		달리웍스	이순호	2013
76		모션블루	홍제훈	2004
77	K-Global 스마트모바일 스타기업 육성	버스킹티비(주)	남궁요	2013
78		자스텍엠	백용범	2016
79		뉴스뱅크 주식회사	신철호	2015
80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2014
81		엔키노 주식회사	성기범	2011
82		미콘커뮤니티	김진국	2015
83		아이포트폴리오	김성윤	2011
84		그린라이트파트너스	황창현	2012
85		크리스피	손대균	2012
86		태글	최현재	2015
87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익스컴퍼니	이선오	2014
88		뉴스젤리	정병준	2014
89		뉴지스탁	문홍집/문경록	2011
90		콜라비팀	조용상	2015
91		웨어앤케어	황성진	2013
92		이넘넷	최승혁	2014
93		오세어하우스	오정익	2014
94		폴라리언트	장혁	2015
95		마블러스	임세라	2015
96		신의직장	노승태	2016
97		엠트리케어	박종일	2013
98		아키드로우	이주성	2014
99		디스커버리호	이은호	2015
100		모바일닥터	오남수	2013

101		리빙라이브러리/왓슈	김영진	2015
102		아펙시(APEXIE)	우정현	2016
103		포제	김도형	2015
104		라이노브파트너스(꿀카)	오종수	2016
105		아티스앤오션	김정일	2013
106		언리얼파크	이상곤	2015
107		엣카르타	김수종	2016
108		오더블유오	이민정	2015
109		드론학교	오상은	2016
110		듀코젠	박정호	2015
111		하이안미래기술	윤여훈	2016
112		리앤컴퍼니	이광민	2012
113		Value&Trust	노경석	2016
114		라이비오	홍기대	2016
115		3D컨트롤즈	이상규	2014
116		엔팩토리	김기용	2015
117		버틀러	이근우	2015
118		컨트릭스랩	김영진	2015
119		리앙	원종은	2015
120		올핀(차자쥬)	최상호	2016
121		엑싱크	송보근	2015
122		카로그	이기상	2015
123		원원국 (밋잇챗)	이준우	2016
124		랄라코스터	손대영	2014
125		스테이크아웃	백상훈	2016
126		에르고	오정택	2016
127		비플렉스	정주호	2016
128		씨드로닉스	박별터	2015
129	K-Global 창업 멘토링	립하이(주)	김병동	2016
130		토닥	민규식	2015
131		힐링비트	김석진	2016
132		팔칠구삼	박덕화	2015
133		바이오뱅크	박성식	2013
134		워드파이	박상철	2015
135		애포샤	김상욱	2016
136		에이스골프	김영준	2014
137		콩테크(주)	이학경	2014
138		제이투에스테크놀로지	정준석	2014
139		밍기단	김이삭	2016
140		FITTA	김정수	2016
141		제이지컴퍼니	이기오	2016
142		캔디원	이유내	2016
143		한다시스템	김선권	2014
144		I.T Style	성민현	2016
145		Hello Factory	김경민	2015
146		빅픽처스	김종민	2016
147		라이스바이오텍	이기영	2016
148		리폴	김세례	2014
149		피크닉파트너스	이희윤	2015
150		네이처프랙탈	신상훈	2016
151		매드퓨처	김준호	2015
152		캐치워크	신다혜	예비창업
153		더불어	임우승	2016
154		씨아이디아우토	민호기	2015
155		STUFP	김위	2015

156		씨에스코리아	최명훈	2016
157		스마트시티그리드	김세규	2014
158		오투오솔루션	이상욱	2015
159		유젠	노영호	2016
160	K-ICT 본투글로벌 해외진출 지원사업	렉스로보	오상훈	2014
161		시큐레터	임차성	2015
162		더블에이치	이경한	2013
163		지에스아이엘	이정우	2013
164		요쿠스	최창훈	2012
165		아벨리노	이진	2009
166		다비오	박주흠	2012
167		놀라디자인	장성은	2012
168		메쉬코리아	유정범	2013
169		스탠딩에그	이종성	2013
170		Noom	정세주	2008
171		아이오로라	장영수	2013
172		아이디어보브	이인영	2012
173		와이브레인	이기원	2013
174		브레이브팝스	이충희	2014
175		TEAMBLIND	문성욱 정영준	2014
176		하남아트텍	최경일	2012
177		마이리얼트립	이동건	2012
178		위서리	이종근	2012
179		아이웨어링소프트	조해경	2015
180		트리플넷소프트	남성태	2014
181		크레스프리	권진만	2013
182		WELT	강성지	2016
183		조이코퍼레이션	최시원	2014
184		큐블릭미디어	최재성	2010
185		투게더	박상준	2012
186		프로젝트민트	박선태	2013
187	K-Global 스마트미디어	나우버스킹	전상열	2014
188		딜리콘(주)	최건수	2016
189		열린책장	강화평	2013
190	K-Global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엔젤게임즈	박지훈	2014
191		메이머스트	박상현	2016
192		티엘에스이엔티	신민호	2013
193		에스비씨엔	이승엽	2014
194		원더풀플랫폼	구승엽	2016
195		티엔젠	심상국	2015
196		신택정보서비스(주)	오훈택	2014
197		이지세이버(주)	양기출	2009
198		지투지솔루션(주)	전선용	2012
199		디노피플	김호현	2015
200		아이오텍	고재수	2015

□ 창조경제혁신센터 선정(100개社)

No	혁신센터명	기업명	대표자	설립년도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더플래그	문근민	2016
2		미디어캐스트	이승택	2016
3		비피소프트	장민호	2015
4		컴패니에이아이	강지훈	2016
5		마인디즈	박종관	2015
6		아마따	정희승	2015
7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원투씨엠	한정균	2013
8		KTB솔루션	김태봉	2008
9		센스톤	유창훈	2015
10		올랄라랩	강학주	2011
11		아마다스	박은민	2014
12		아토큐브	한상택	2014
1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투씨	김유정	2015
14		우드로이현	이현진	2016
15		명승골프	이동명	2013
16		엣지	정예호	2016
17		블루웨일	김지홍	2016
18		다운울솔레트	이기주	2015
19		탑틀링시스템즈	이성근	2015
20		위드인터페이스	박부영	2006
21		한벌	김다영	2014
22		푸드엔텍	신승아	2015
23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비비디	김가임	2016
24		살린	김재현	2014
25		워드어스	허영희	2014
26		파머블	김대오	2016
27		형제파트너	김정완	2012
28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카	강오순	2016
29		모빌리션 주식회사	정지민	2015
30		에스오에스랩	정지성	2016
31		유니즈소프트	윤요환	2016
3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스케치온(주)	이종인	2015
33		솔티드벤처(주)	조형진	2015
34		잼이지	전대영	2015
35		블루핵	윤영복	2015
36		망고슬래브(주)	정용수	2016
37		모픽	신창봉	2015
38		모바일택스	마원호	2013
39		인투로	최영우	2013
40		엔지니어스톡	김성환	2015
41		빅스	원중희	2015

42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와이젯	박철순	2015
43		코너스톤테크놀로지	김동오	2014
44		이지벨	김종민	2015
45		팝페이	황인성	2015
46		룩시드랩스	채용욱	2015
47		지지케이	김유식	2012
48		버드레터	양선우	2014
49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즈프로브	신광일	2014
50		시옷	박현주	2015
51		피엔솔루션	차경진	2016
52		페이엠월드	강다윤	2016
53		엑세스아이씨티	최학주	2013
54		유니크온	김민영, 이성명	2011
55		포스트미디어	김재현	2009
56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큐비트시큐리티	신승민	2014
57		이연택디자인연구소	이연택	2016
58		이눔들연구소	최현철	2015
59		YB Soft	유영배	2013
60		크리에이티브밤	마명엽	2015
61		핀인사이트	이민호	2015
62		스마트컨버전스	박효정	2015
63		스왈라비	정해권	2015
64		브라켓디바이	김다정	2016
65		태주산업	신헌수	2010
66		와이엘캠퍼스	이상돈	2014
67		트위그팜	백선희	2015
68		오브이엔	고동현	2013
69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포에스텍	이승원	2013
70		지와이네트웍스	방승온	2016
71		니어투	박세준	2014
72		인프로	최승혁	2015
73		아이오티 주식회사	서병현	2016
74		녹원정보기술(주)	윤명록	2011
75		링크온(주)	손용식	2015
76		드리옴	최우진	2015
77		커넥티드에잇	김은규	2014
78		제브라앤시퀀스	오동근	2015
79		코어무브먼트	김명철	2016
80		스마트아이즈	한운용	2016
81		리벌티	이은진	2016
82		CROM(크롬)	이용민	2015

83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엄청난벤처	이유미	2014
84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건파워	홍용표	2005
85		하오문	하영섭	2015
86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재밋섬파크	이재성	2014
87		태인교육	유호재	2015
88		투블루	우혁준	2015
89		엔블리스컴즈	정지후	2015
90		램프어드바이저리	김건호	2014
91		단비코리아	공경남	2015
92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디오션	김두환	2015
93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코레스	김광진	2015
94		에몰라이즈	김의순	2014
95		바이오필리아	유문조	2012
96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어거스트텐	최도연	2016
97		지씨아이	유봉국	2015
98		스마프	채한별	2015
99		스마트웰니스	신재광	2013
100		나리지식&컴퍼니	노경환	2013

문체부, 2016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등 8개(권역별 최우수 4개, 부문별 우수 4개) 체육시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016년도 우수 공공체육시설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등 8개 공공체육시설을 선정했다.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경영 관리와 운영 활성화, 시설 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다.

올해에는 응모된 32개 전국 체육시설에 대한 3단계 심사(서류심사 → 현장실사 → 최종심사)를 거쳐 권역별 최우수시설 4개소(수도권, 충청·강원권, 전라·제주권, 경상권)와 부문별 우수시설 4개소(프로그램, 예산 절감, 시설물 유지 및 안전 관리)를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했다.

권역별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수도권), ▲천안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충청·강원권), ▲나주국민체육센터(전라·제주권), ▲포항시민볼링장(경상권)이 선정되었다. 부문별 우수 공공체육시설로는 ▲중곡문화체육센터(프로그램), ▲대전월드컵경기장(예산 절감), ▲서울월드컵경기장(시설물 유지관리), ▲시흥국민체육센터(안전관리)가 선정되었다.

이 중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는 경영 실적, 시설물 및 안전 관리 상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 상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천안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도 특화된 수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장애인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운영해 권역별 최우수 및 부문별 시설 평가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나주 국민체육센터는 재정이 약한 도농복합도시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포항 시민볼링장은 1984년 건립된 전문체육시설을 생활체육으로 활용하면서 경영수지를 개선해 우수시설로 선정되었다.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권역별 최우수상에는 문체부 장관상이, 부문별 우수상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해당 시설에는 우수 공공체육시설 지정 동판이 부착되고 담당 직원들은 해외 견학의 혜택도 받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지자체가 2016년 생활체육 시설 사업에 공모할 때 가산점(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모범 사례가 다른 공공체육시설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관련 모범 운영사례의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의 우수한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찾아 선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우수한 사례를 공유해 지역의 우수 공공체육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활체육 활성화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영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6년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결과

권역	구분	시설명(운영주체)	우수 운영사례 요약
수도권	수도권 최우수	서울 금천구 구민문화체육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전반적 운영 상태 매우 우수한 평가 점수 전국 1위 시설 ○ 차별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출과 고객 만족도가 동반 상승하고 높은 시설 활용률을 자랑하는 모범적 시설
	부문우수 (프로그램)	서울 광진구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보건소 연계 수중재활 프로그램, 교과부 연계 어린이주말 프로그램, 장애우 재활기관 연계 체육교실 등 공공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여 운영하는 우수 시설
	부문우수 (안전관리)	경기 시흥시 국민체육센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 정기, 비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 강화 개보수 실적 우수한 시설 - 위급상황 시 대피 동선을 효율적으로 안내하는 사인 개발 운영, 보조발전기 작동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시스템 가동 등
	부문우수 (시설유지관리)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시시설관리공단)	○ 경기장, 조경, 조명, 전기.방송설비, 고객 시설 등 시설을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시설 - 시민이용 10배 확대 프로젝트 시행으로 전문체육시설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우수 사례
충청·강원권	충청강원 최우수	충남 천안 종합운동장국민체육센터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특화된 수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입 증대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는 충청권 우수 시설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장애인 점자 안내판과 전용사물함을 설치하는 등 타 시설 운영에 비해 우수함
	부문우수 (예산절감)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 (대전시시설관리공단)	○ 경기장 냉난방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유지비와 연료비를 줄여 예산 절감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시설
전라·제주권	권역 최우수	전남 나주시 국민체육센터 (나주시)	○ 재정이 약한 도농복합도시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차별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수체육시설 - 신재생에너지 4종(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히트펌프)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경비 절감 추진
경상권	권역 최우수	경북 포항시 시민볼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1984년 조성된 전문체육시설(국제볼링장)을 생활체육으로 활용하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있는 경상권 우수 체육시설 - 직원 제안으로 안내프린트를 전산화하여 고객 가동률 제고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 대책 추진

《 주 요 내 용 》

- ◇ (최근 발생 동향) 기존 발생지역인 천안('16.12.31,'17.1.2), 안성('17.1.1), 화성('17.1.1)에서 AI 발생
 - * 살처분·매몰은 3,033만수 (닭 2,582만수, 오리 233만수, 메추리 등 218만수)
- ◇ (방역 추진 상황) 24시간 살처분 원칙으로 1.2일 신고된 천안 메추리 농장 등 당일 살처분 완료 및 매몰 추진
 - 신고지연 3개 농가(나주, 평택, 진천)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조치 및 고발(10건) 등 방역기준 위반 농가 조치
 - 고양이의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 ◇ (주요 방역 조치) 지역별, 취약농가형태 방역조치 및 매몰지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점검 실시
 - [지 역 별] 나주·영암, 고창·부안·정읍 일제검사 및 중점지도
 - [취약농가] 100수 미만 소농가,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등 특별관리
 - [매 물 지] 관리대상 396개 매몰지 점검 추진, 전담공무원 관리
- ◇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중장기로 구분 추진과 월별 점검, 방역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1. 발생 동향 및 진단

- (발생동향) 지난해 11.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확진된 이후 경북, 제주를 제외(광역시는 세종부산 발생)하고 전국에서 발생
 - 최근에 기존 발생지역인 천안('16.12.31 산란계 21만수, 1.2일 메추리 25만수), 안성(1.1일 산란계 37만6천수), 화성(1.1일 산란계 4만8천수) 농장에서 발생
 - * 지역별 발생건수 : 음성 47건, 천안 40건, 진천 26건, 정읍 22건, 안성 19건, 화성 3건 등

○ 양성 농장은 307호이며 41개 농장이 정밀검사 중에 있음

* (축종) 산란계131, 육용오리100, 종오리30, 토종닭18, 산란종계5, 육용종계 10, 육계2, 메추리5, 백세미 3, 산란오리1, 오골계1, 관상조류 1

○ 살처분·매몰은 3,033만수이며 이중 닭이 2,582만수, 오리는 233만수, 메추리 등이 218만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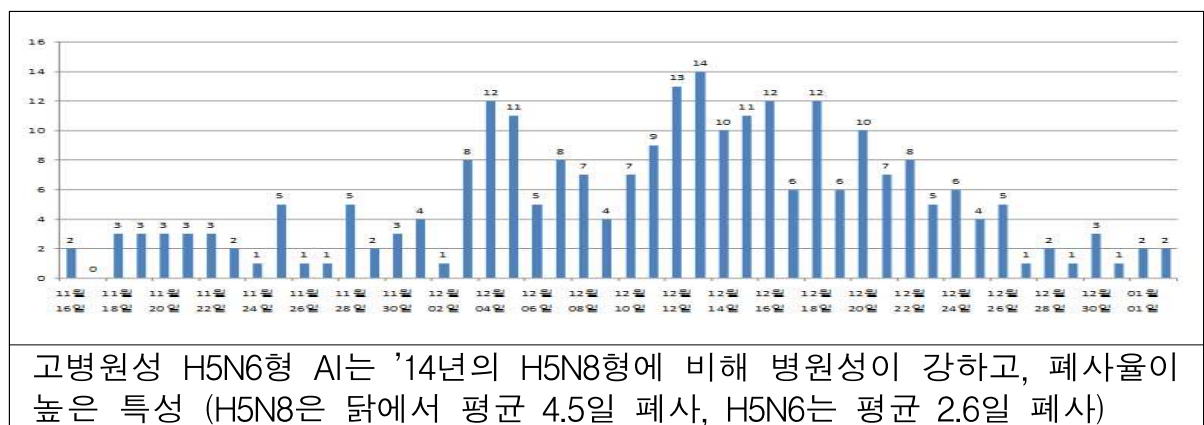
* (산란계) 2,245만수(사육대비32.1%), (산란종계) 41만마리(48.3), (육계, 토종닭) 213만마리(2.8)

○ 야생조류에서 10.28일 이후 33건(야생조류 20, 분변 13)*이 검출 되었으며 2개 유형(H5N6: 28, H5N8: 1)이 검출*됨

* 원앙 3건, 큰고니 7건, 흰뺨검둥오리 3건, 수리부엉이2건, 청둥오리2건, 쇠오리 1건, 알락오리 1건, 흰뺨검둥오리 1건 외 13건은 야생조류분변시료

□ (발생추이·진단) 최근 1~3건 신고로 감소추세이나 기존 발생지의 추가발생 차단, 경북 등 비발생 지역으로 확산 방지가 관건

○ 가창오리가 동림 저수지 → 금강하구 → 삼교호 순으로 북상으로 이에 대응한 농가 방역 강화 필요



2. 최근 방역 추진 상황

□ **(부처 협력)** 12.14일부터 장관 주재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적 AI 총력 대응

-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점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 관리평가에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행자부) 지자체에 AI 예찰활동을 강화, 연초 모임·행사시 차단 방역활동 이행 강조 및 이동통제초소에 경찰력 지원
- (국방부) AI 확산차단 총력대응 기간 동안 살처분을 포함한 전 분야 적극 지원, 사전에 지원소요 확인 지원 등 추진
- (환경부) 주요 철새도래지 모니터링 결과 관계기관 송부 및 농식품부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생산자단체 정보 제공
- (질병관리본부) 인체감염 관련 정보제공, 고위험군 모니터링 (대상자 17,407명) 실시하였으며 증상신고자 38명 모두 AI음성

□ **(살처분)** 24시간 내 살처분 원칙으로 1.2일 신고된 천안 메추리 농장 등은 당일 살처분 완료 및 매몰 추진

- 민·관·군 총력 대응으로 살처분 잔여두수 12.31일 이후 없음
 - * 살처분 잔여두수(만수) : ('12.15) 427 → ('12.26) 153 → (12.27) 43 → (1.2일) 0
- 시·도, 시·군 단위 기동방역타격대 등을 구성하여 대비* 중
 - * 농식품부 중앙기동방역타격대 100여명 가용 가능

< 방역 동원 인력 현황 : 105,284명 ('17.1.2기준) >

- ◇ 살처분·매몰 등 처리 : 공무원 5,227명, 군인 80, 민간인 24,324명 (누계)
- ◇ 이동통제초소 : 공무원 29,411명, 경찰·군인 4,362명, 민간인 41,880명 (누계)

□ **(제재조치)** 11.16일 이후 항체가 검출된 신고지연 3개 농가(나주, 평택, 진천)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조치* 및 고발 10건**

* 나주(종오리), 평택(산란오리), 진천(종오리) 3농장의 경우 AI 항체가 형성(항체 형성에 최소 10일 이상 소요)되어 신고지연 감액 사유에 해당

** 이동제한위반 5건, GPS 미장착·미등록 4건, 기타 1건

□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 세종, 천안, 안성 등 AI 발생지역에서 길고양이 포획 및 폐사체를 수거, AI 감염 여부 확인(1.3~1.13)

* 11개 시·군·구 및 서울 등 7개 광역시에서 각 10두 이상(총 180두 이상)
(시·군·구 의뢰 → 시·도 방역기관 1차 검사 → 검역본부 최종 확진)

* 포천 포획(12.31~1.1) 길고양이 5두와 개 2두는 검사 중

- 인근 마을주민(142명)과 감염 관련 접촉자(12명) 예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음

○ 어린이 등 국민예방수칙, 수의사·동물보호소 직원 등을 위한 예방수칙, 질의·응답집 배포 및 대국민 홍보*

* 야생조류·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 등과 접촉 금지 방송홍보, 카드뉴스 홈페이지 게재

○ AI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의 개, 고양이, 돼지 등 1,839건 항원 검사 결과, 음성이었음('16.11.16.~16.12.31)

AI 발생농장 및 역학 관련 농장등의 개·고양이·돼지 검사 실적

□ 축종별 AI 항원·항체 검사 실적('16.11.16.~16.12.31)

구분	항원(비강시료검사)		항체(혈액시료검사)		양성건수
	농가수	검사두수	농가수	검사두수	
개	57	200	55	178	-
고양이	2	4	2	4	-
돼지	46	1,635	40	1,440	-
소계	105	1,839	97	1,622	-

* 발생농가 고양이 검사 내역 : 경기 평택(2농가 4두)

□ 지역별 AI 항원·항체 검사 실적('16.11.16.~16.12.31)

구분	항원(비강시료검사)		항체(혈액시료검사)		양성건수
	농가수	검사두수	농가수	검사두수	
강원	2	8	2	8	-
경기	62	971	58	793	-
경남	2	4	-	-	-
세종	27	743	27	743	-
전남	9	38	8	18	-
전북	1	15	-	-	-
충남	2	60	2	60	-
소계	105	1,839	97	1,622	-

※ 발생농가 외 경기 포천 길고양이와 접촉한 가정집 사육 고양이(폐사)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검출

3. 주요 AI 추가 방역 조치 (12.19 이후)

□ (지역별 대책) 나주·영암, 고창·부안·정읍 일제검사 및 중점지도

- (나주·영암) 오리농가 일제검사 추진(69호중 54호 시료채취, 28농가 검사결과 이상 없음)
- (고창·부안·정읍) 동립 저수지 인근 가금농장 매일 소독·예찰,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 신기 등 기초방역요령 중점 지도

□ (취약농가 대책) 소규모 가금 취약농가 및 밀집 사육 농가 방역 강화

- 100수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수매, 조기도축, 예방적 살처분 등 권고*
* 야외 방사 금지 및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금지
- 전국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152개* 중 미 발생농가(92개) 특별 관리 (농장당 1~2인을 배치하여 사료차량, 계란운반차량 등 이동통제)
- 검역본부, 민간전문가, 시·도 합동으로 위험지역(13개)과 경북 밀집사육지(6개)에 컨설팅 실시(1.2~1.9)
 - 주변 들짐승(취 등) 접근 방지를 위한 생석회 살포(2m) 안내 및 점검

□ (매몰지 관리) 매몰지 관리 철저히 침출수 등 2차 피해 발생 방지

- 관리대상 매몰지 396개소 중 274개소 점검 결과*, 침출수 유출 없음
* 나머지 관리대상 매몰지 점검 실시
- 매몰지 전담공무원 실명제 운영(지자체) 및 정부 합동점검 병행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전국 매몰지 현황·점검·조치사항 등록 관리

□ (이행점검)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합동 점검반을 통해 보상금 조기 지급, 방역상황 등 점검(12.19~)

4. 농가 등 지원 대책

- **(살처분 보상금)** 방역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양성농장 20% 감액, 방역의무 미준수 시 5~80% 추가 감액)
 -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은 2,304억원(국비 1,843, 지방비 461) 추정*
 - * 농가당 평균 약 3.7억원 추산 ('14/'15년 농가당 평균 약 3.3억원 추산)
 - 살처분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 선지급
- **(생계안정자금)**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월 257만원)의 3~6개월분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소요액 12.4억원(국비 8.8, 지방비 3.6) 중 국비 3.7억원 기교부
 - * 지원요건: 국비 70%, 지방비 30%
-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이동제한 해제 후, 출하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산출하여 지원('14/'15 농가당 평균 약 4백5십만원 지원)
 - * 출하지연 사육비, 폐사율 증가, 상품가치 하락, 입식 지연, 미사용 사료 폐기
- **(가축입식자금)** 살처분 농가가 가축을 재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되는 입식비용 지원* ('14/'15 농가당 평균 약 1억원 지원)
 - * 지원요건: 금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자체 방역비용 지원)** 지자체 통제초소 운영·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
 - 지자체의 소요 비용 중 3,899백만원 지원 추진(16.12.20일 기준)
 - * 지자체의 방역추진에 소요된 비용은 추후 정산후 지원
 - * '14~'15년 고병원성AI 6,444백만원 지자체 지원

5. 수급 안정 대책

□ (현황) 산란계 및 종계 매몰두수 확대로 산지가격은 상승 추세

- 산란계 2,245만수 살처분(사육대비 32.1%)으로, AI 발생 이전 대비 약 30% 수준 생산량 감소 (4,300 → 3,000만개/일)
- '17.1.2일 산지가격은 2,060원으로 '15년 12월 대비(1,036원) 98.8%, '16.11월 대비(1,242원) 대비 65.9% 상승
 - 소비자가격은 2,750원으로 '15년 12월 대비(1,818원) 51.3% 상승

품목		전년동월 (‘15.12)	전월평균 (‘16.11)	최근가격		대비(증감%)		
				12.30(금)	1.2(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전일대비
계란 (특란)	산지(원/10개)	1,036원	1,242	1,973	2,060	98.8%	65.9	4.4
	소비자(원/10개)	1,818원	1,853	2,744	2,750	51.3%	48.5	0.2
	소비자(원/30개)	5,455원	5,558	8,231	8,251	51.3%	48.5	0.2

□ (공급확대) 단기·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월별로 지속 점검

- (생 산)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5% 계란 생산증가 효과)
- (수 입) 신선란과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공급량 확대
 - 할당관세 물량은 98,600톤이며 적용 대상은 신선란(관세율 27%), 계란 가루(27%), 계란액(30%) 등 8개 품목 ('17.1.4일경 적용예정)
 - 할당 관세 적용 이외 운송료 일부 지원 등 추진

□ (생산기반) 산란계를 조기에 공급하여 생산기반 회복 노력

- (종 계) 국내 원종계를 통한 산란 종계 생산(월 8만 마리) 및 종계 수입(13만)을 통한 산란종계 적정 마릿수(55만수) 확보('17.3월까지)
 - * 산란계 수입에 필요한 항공운송비 일부 지원 추진
- (산란계) 산란계 조기공급을 위해 비발생 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농가 공급 추진

6. 중·단기 방역 대책 계획

□ (단기대책) 단기간 내 추가 발생 가능성 대비한 방역 대책

- (매몰지 확보) 살처분 지연 방지를 위해 매몰지 사전 선정
- (살처분 인력 확보) 시·군 단위로 AI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 내 인력 동원체계 구축(공무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용역 등)
 - * 방학기간 지역 인근 축산·수의 대학생의 살처분·매몰 참여 유도
- (지자체 인력 훈련) 시·군 단위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하여 긴급 방역체계 재정비 및 현장방역 역량 제고
- (입식 관리) 지자체 가축방역관이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점검한 후 입식 허용
 - * 재발 위험이 높은 농장은 입식제한 방안 검토

□ (중기대책) 연례적인 AI 발생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 주요 제도개선 검토과제(안) >

- ① (차단방역 강화) 농가·계열사 방역주체의 책임방역 정착
 - AI 지속 발생농장 축산업 허가 제한, 계열업체 살처분·매몰 비용 부담 등
 - 사육환경 개선 및 거점 집하장 설치 등 계란 유통체계 개편
 - 철새 인근 사육제한 유도, 휴업보상제 검토, 방역 우수농가 인센티브, 방역 소홀 농가·계열사 패널티 등 차별화 (살처분 보상금, 정책자금 지원 등)
- ② (방역 시스템 개선)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강력한 초동대응
 - 평시 예찰방식 개선 및 민간연구기관의 AI 발견 신고 의무 부여 등 추진
 - 농가별 방역 평가제 운영을 통한 방역 우수농가 육성 등
- ③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방역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
 - AI 신속진단 기술 개발, 드론 활용 방역실태 점검, 축사 내 적정온도 등 최적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국내 AI 바이러스 유입 예측 프로그램 개발 등

참고 1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

- **누계('15년 이후) : 총 53개 국가, 2,636건 발생('17.01.01. OIE 보고기준)**
 - '16.01.01.(OIE) : 보고 없음

구 분	2015년										2016년											
	H5	H5N1	H5N2	H5N3	H5N6	H5N8	H5N9	H7N3	H7N7	소계	H5	H5N1	H5N2	H5N5	H5N6	H5N8	H5N9	H7N1	H7N3	H7N7	H7N8	소계
국가(개)	3	23	5	1	5	7	1	1	2	33	8	16	3	1	4	19	1	1	1	1	1	45
발생 (건)	13	435	835	25	32	334	16	5	2	1,697	34	280	32	1	26	530	4	1	28	2	1	939

- * '15년 HPAI 발생국(야생 포함) : H5(가나, 카자흐스탄, 팔레스타인), H5N1(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미국, 미얀마, 베트남, 부르키나파소, 부탄, 불가리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 캄보디아, 캐나다, 코트디부아르, 터키, 팔레스타인, 프랑스), H5N2(대만, 미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H5N3(대만), H5N6(대만, 베트남, 중국, 홍콩, 라오스), H5N8(대만, 독일, 미국, 스웨덴, 일본, 캐나다, 헝가리), H5N9(프랑스), H7N3(멕시코), H7N7(독일, 영국)
- * '16년 HPAI 발생국(야생 포함) : H5(미얀마, 러시아, 이라크, 일본, 우크라이나, 튀니지,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H5N1(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오스, 레바논, 베트남, 부탄, 이라크, 인도, 중국, 코트디부아르, 방글라데시, 프랑스, 캄보디아, 카메룬, 토고), H5N2(대만, 프랑스, 미국), H5N5(몬테네그로), H5N6(베트남, 중국, 홍콩, 일본), H5N8(대만, 인도, 크로아티아, 스위스,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란, 핀란드, 프랑스, 루마니아, 이집트, 세르비아, 영국, 나이지리아, 그리스), H5N9(프랑스), H7N3(멕시코), H7N1(알제리), H7N7(이탈리아), H7N8(미국)

□ 해외 AI 인체감염 현황(출처 : WHO webpage)

○ (H5N1) 총 856명 감염, 452명 사망(WHO, '16.12.30일 기준)

구분	'03~'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²⁾	총계 ¹⁾
감염자(명)	468	48	62	32	39	52	143	10	856
사망자(명)	282	24	34	20	25	22	42	3	452
발생국가수	15	5	5	6	7	5	3	1	16

- 1) 국가별(16개국) 감염자 수(856명) : 이집트(356), 인도네시아(199), 베트남(127), 캄보디아(56), 중국(53), 태국(25), 터키(12), 아제르바이잔(8), 방글라데시(8), 파키스탄(3), 이라크(3), 라오스(2), 미얀마(1), 나이지리아(1), 지부티(1)
- 2) '16년 발생국(1개국) : 이집트 10명, 사망 3명

○ (H7N9) 총 808명 감염, 324명 사망(WHO, '16.12.30일 기준)

구분	'03~'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²⁾	총계 ¹⁾
감염자(명)	-	-	-	158	341	178	131	808
발생국가수	-	-	-	2	3	2	1	4

- 1) 국가별(4개국) 감염자 수(808명) : 중국(801), 대만(4), 말레이시아(1), 캐나다(2)
- 2) '16년 발생현황 : 중국 131명, 사망 41명

□ 해외 AI 인체감염 현황(출처 : 질병관리본부, '16.12월 현재)

○ (H5N6) '14.4월이후 총 17명 감염, 10명 사망, 중국만 발생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감염자(명)	2	5	10	17명
사망자(명)	1	4	5	10명
발생국가수 ¹⁾	1	1	1	1개국

참고 2

그동안 AI 발생 및 조치현황

구분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14/15년	'16년 상반기
시기	겨울철 (08.12.10~04.3.20) (102일간)	겨울철 (06.11.22~07.3.6) (104일간)	봄철 (08.4.1~5.12) (42일간)	겨울철 (10.12.29~5.16) (139일간)	겨울철 (①'14.1.16~7.29, 195일, ②'14.9.24~6.10 260일, ③'15.9.14~11.15 62일) (669일간)	겨울철 (16.3.23~4.5) (13일간)
지역 및 건수	10개 사군 19건 (닭 10, 오리 9)	5개 사·군 7건 (닭 4, 오리 2, 메추리 1)	19개 사군구 33건 (닭 21, 오리 6, 닭·오리 복합 6)	25개 사·군 53건 (닭 18, 오리 33, 메추리 1, 꿩 1)	19개 사·군 38건 (① 19개 사군 29건(닭 1, 오리 17, 가위 1) *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212건 양성(11사도 4사군) ② 8개 사군 9건(닭 5, 오리 4) *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162건 양성(9사도 34사군) ③ 0개 사군 0건 *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17건 양성(2사도 6사군구)	2개 사군 2건 *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2건 양성(1사도 2사군구)
방역 조치	•'02.2호 528만 5천수 살처분 •'04.5.29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04.9.21 청정국 선언(6개월 후)	•'04.6호 280만 수 살처분 •'07.5.2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07.6.18 청정국 선언(3개월 후)	•'05.1호 100만 4천수 살처분 •'08.6.29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08.8.15 청정국 선언(3개월 후)	•'06.2호 67만 3천수 살처분 •'11.7.3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11.9.5 청정국 선언(3개월 후)	•'09호 1,937만 2천수 살처분 ① 548호 1,336만 1천수 살처분 ② 234호 511만수 살처분 ③ 27호 30만 1천수 살처분 • Standstill 4회 발동 -1차: '14.1.19.0시~1.20.24시(48hr, 호남) -2차: '14.1.27.6시~1.18시(12hr, 충청·경기) -3차: '15.1.17.6시~1.18.18시(36hr, 전국) -4차: '15.9.18.0시~9.19.0시(24hr, 광주·전남) • '15.12.22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16.2.28 청정국 선언(3개월 후)	• 5호 1만 2천수 살처분 • Standstill 1회 발동 -1차: '16.3.27.0시~3.28.12시(36hr, 경기) • '16.4.27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16.8.18 청정국 선언(3개월 후)
혈청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8형	H5N8형
재정 소요액	874억원 살처분보상금 48 생계소득안정 5 입식용자수매등 361	339억원 살처분보상금 23 생계소득안정 15 입식용자수매등 71	187억원 살처분보상금 63 생계소득안정 48 입식용자수매등 106	87억원 살처분보상금 60 생계소득안정 39 입식용자수매등 98	2,381억원 살처분보상금 1,392 (1차 1,017, 2차 375) 생계소득안정 73(1차 47, 2차 26) 입식용자수매등 916('14.870, '15.46)	4억원 살처분보상금 4

2017년, 새로운 '통합환경관리'가 시작된다

- ◇ 발전·증기공급·소각업부터 시작, 2021년까지 19개 업종 1,300개 대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 ◇ 배출시설별 10개 인허가를 사업장별 1개 허가로 통합
-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배출기준 적용

□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환경부(장관 조정규)는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30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 적용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m³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향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적용대상 사업장은 약 1,300개이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약 70% 차지

- 다만, 제도 전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에는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업종별 시행시기('17~'2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기업 (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소각)	비철금속 철강제조 기초화학 (유기)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기초화학 (무기)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 기존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시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고, 허가기관도 제각각이었다.

○ 그러나, 사업장 내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통합허가 1건으로 통합되어 절차는 간소화되는 반면,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 (예) 배출시설이 60개인 대기 2종 사업장에서 필요한 160여 건의 인허가(허가종류별로 환경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 상이)가 1개의 사업장 단위 허가(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로 전환

○ 70여 종의 신청서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허가 전 과정은 2017년 1월 2일에 개통될 예정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처리된다.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별화된다.

○ 오염물질별 환경질 목표수준을 정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마다 배출된 오염으로 인하여 목표수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된다.

□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자 의무사항이 허가조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전환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 허가조건은 사업장 여건이나 시설특성 등을 감안하여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므로 사업장별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초속 1.5m의 바람이 불면 저탄장에 방풍막 설치 → 디지털 풍속계 설치, 풍속 측정결과 보존, 1.5m/s 이상의 풍속 측정시 방풍막 설치

- 또한 허가조건은 허가배출기준과 함께 5년마다 재검토하여 주변 환경 변화나 시설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 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성이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한다.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은 각 시설 및 공정에 적용되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면서 환경개선이 가능한 우수 환경관리기법

- 이를 위해 산업계 종사자, 공정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적가용 기법 기준서’를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전기·증기 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16.10.13)

- 또한, 기준서는 5년마다 업데이트하되, 업종별 시설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그 외에도 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가동개시 신고 이후 현장점검 실시, 시운전 이후 오염도 측정 등 허가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정기점검의 빈도는 1~3년 1회로 대폭 낮추고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닌 기술지원과 문제해결 방식으로 전환하고,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은 일회적인 기준 초과에 대해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장이재 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배출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기술 개발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부는 제도 문의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통합환경관리 콜센터’(☎ 1522-8272)를 운영 중이다.
 - 또한,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100문 100답’ 자료집을 배포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요.
2. 질의응답.
3. 용어설명. 끝.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 (허가통합) 수질·대기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
 - 최대 73종의 신청서류가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
- (허가검토) 사업장의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허가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필요시 ‘허가조건’ 부여
 - * 허가기준 : ①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③환경오염사고대책 적정 수립

② 19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마련·보급

-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 주기적으로 검토·보완
 - * 선정기준 : 현장적용 가능성, 경제성, 환경개선 효과, 에너지 및 자원이용 효율

③ 사업장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부여
 - 최적가용기법에 근거하여 최대배출기준 설정,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목표수준을 만족하도록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 * 수도권대기총량제 사업장, 하·폐종 간접방류 등 제도 및 배출특성에 따른 배출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인정

④ 주기적 허가조건 등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 최초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주기적(5~8년)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는 등 사업장 여건 변화 반영
- 허가정보(신청서·허가서 등)를 적극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 도입, 허가 소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통합허가시스템 구축·운영

1. 기존 환경허가제도와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2. '17년 제도 시행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 제도시행을 차질없이 준비 중
- ☐ 지방청별로 통합환경관리 담당관(총 33명)을 지정하여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역량 배양

3. 1·2종 사업장에서만 통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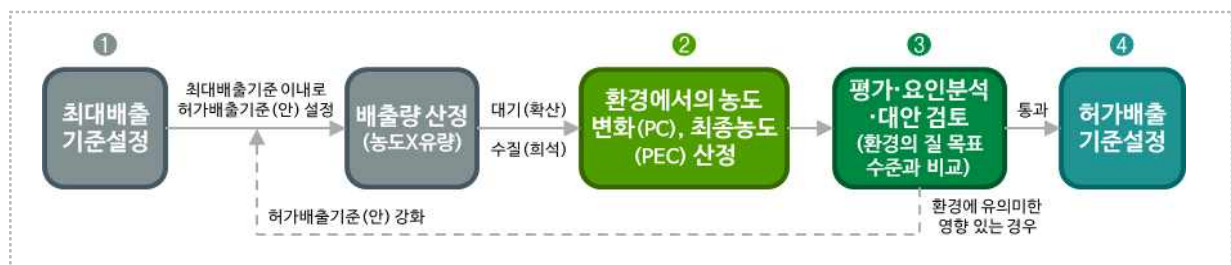
- ☐ 중소 사업장(3~5종)은 희망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신청서류 중 일부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됨

4. 허가업무는 어느기관이 수행하게 되는지 ?

- ☐ 제도의 전문성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안착 시점까지는 환경부가 일원적으로 수행할 계획
- ☐ 효율적 제도 시행을 위해 허가검토시 지자체 의견수렴, 사업장 허가정보 공유 등을 관련지침 등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문역량 배양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5. 허가배출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

- ☐ 업종별 최대배출기준(최적가용기법 적용시 배출 최대치) 이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



* 추가오염도(PC, Process Contribution) : 배출 오염물질이 수용하천 또는 지역대기에 섞일 경우 농도 증가량(대기는 확산, 수질은 희석의 영향 고려)

** 총오염도(PEC,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 수용하천 또는 지역 대기의 예측농도로서 배경농도에 PC를 추가하여 산정

- ☐ 허가배출기준(안)은 배출영향분석을 토대로 사업자가 제시하고, 허가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

* 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출영향 분석 프로그램 보급 예정

용 어	해 설
배출영향분석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으로 허가배출기준 설정시 환경기준, 기존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기술작업반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업종별로 구성·운영되며 관련 산업계,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 참여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물로서,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결과,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대책,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내용 등을 포함
허가배출기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지역의 환경질 수준 및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한계 기준을 의미하며,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설정
최적가용기법 (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 기법으로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BREF : BAT Reference)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참고문서로서, 산업 현황 일반정보, 생산공정과 적용 기술현황, 에너지·자원소비·오염배출 특성, 최적가용기법 및 새로운 후보기술 등을 포함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통합환경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일괄(One-Stop) 서비스 제공

중장년, 열정과 노력으로 다시 잡(job)았다!

-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재취업 우수사례집 발간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재취업 도전에 성공한 중장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2016년 중장년 재취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이번 사례집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정과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 재취업한 중장년들의 이야기와 함께, 장년인턴취업지원제를 활용해 장년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일터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장년친화 고용우수기업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 특히 금융업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특화 전직지원서비스가 소개되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업종 퇴직자에게 재취업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사무총장은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도움으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열정과 노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중장년 재취업 우수사례집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장년들을 위해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번 발간된 2016년 중장년 재취업 우수사례집을 2017년 1월 한달 동안 신청을 받아 50명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 노사발전재단은 전국 12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40세 이상 중장년층 재직근로자를 위한 생애경력설계부터 퇴직예정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퇴직지원프로그램 등 중장년층에 특화된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붙임> 중장년 재취업 사례(우수사례집 발췌)

【우수사례 1】

농업회사법인 코엔에프(유) 본부장 박영전(50세)님 (우수사례집 발췌)

대기업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최고책임자(공장장)까지 탄탄한 길만을 걸어왔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공장 내 사고로 인해 그는 책임을 지고 하루아침에 정든 일터를 떠나야 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함과 아픈 상처, 그리고 말 못할 회사 내부의 사정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 당시 자신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은 어둠과 절망뿐인 것 같았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살아온 날만큼이나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직시하고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다.

50세라는 나이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과거 경력도 오히려 회사입장에서 부담스러워 했다. 잦은 탈락으로 낙담하고 있던 그때. 그에게 좋은 소식 하나가 돌아왔다. 바로 노사발전재단이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운영하는 재도약프로그램이었다. 취업관련 교육을 받고 현실에 맞는 구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보자는 컨설턴트의 제안에 따라 좀 더 눈높이를 낮추고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세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회사를 만나게 되었다.

【우수사례 2】

현대아미스(주) 브라운스톤 관리소장 김을중(60세)님 (우수사례집 발췌)

‘기존의 연봉이나 관록, 명예, 체면들은 모조리 내려놓아라. 중장년인 상황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낮은 자세로 자신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구직전선을 누벼야한다. 쉽게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내어줄 만한 곳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재도약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재도약을 노리는 중장년의 머리를 일깨워주는 기탄없는 컨설턴트의 조언이었다. 나 역시 지금까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도약프로그램 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실습시간. 지금까지 내가 작성하여 취업처에 제출했던 이력서는 채용담당자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구식이었다. 재래식 무기를 들고 취업전선을 뛰고 있었던 셈이다. 일목요연하고 간결하면서도 눈에 쏙 들어오는 양식과 세련된 문장을 잘 제시해 주었다.

심지어 교육시간 후 내가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퇴고를 개별 부탁하자 바쁘게도 전혀 싫은 기색 없이 흔쾌히 점검해주었다. 정말 감동이었다. 나는 실제로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면접관으로부터 자기소개서를 아주 잘 썼다는 공개 칭찬을 듣기도 하였으며, 2016년 7월에 현재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서류에서부터 집중하고 차별화한 덕분에 가능했다.

2017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1 가족 분야

- ☐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 * 지원금액은 올해와 동일(소득에 따라 가형 91만 원, 나형 65만 원, 다형 39만 원)
- ☐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이 본격 실시된다.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내용물)와 매뉴얼(안내서)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200여 명을 양성해 교육을 지원한다.
 -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사업**('16년 6개소 시범운영)이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된다.
-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처음 문을 열고,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이 확대된다.
-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은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며, 교실·도서실·

컴퓨터실 등이 설치돼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그동안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도 내년
부터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② 여성·양성평등 분야

- 공공부문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선도하도록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 된다.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가족친화인증 부여

** 근거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7항(17년. 3월 시행)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2017년 12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한다.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는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난다.

-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훈련과정도 확대된다.

* 소프트웨어, 바이오사업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과정 중심 확대

-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 중인 조례·규
칙 및 소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이에 따라 도시재생, 지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직결
된 지역정책도 양성평등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주요정책과 법령 등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

③ 권익 분야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강사 파견 무료 지원)이 올해 3,600여 회에서

내년 5,100여 회로 확대 시행되며, 도서벽지, 여성안전취약지역 등에 우선 제공된다.

- 또한 공공기관,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돼,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기관 내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6. 11. 30.)

-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인 화상채팅 등 온라인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이 게시된다.

- 내년 6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화면에 성매매 불법성 등 기존 경고문구 외에도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6. 12. 1.)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이 확충된다.

- 해바라기센터(37→38개소),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8→9개소),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11→12개소), 폭력피해자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276→296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28→30개소)이 늘어난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 원에서 월 129만 8천 원으로, 간병비는 1인 평균 월 105만 5천 원에서 월 108만 7천 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도 4천만 원이 신규 지원된다.

4 청소년 분야

-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내년 1월부터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이 교통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 3개의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내년 6월부터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 나이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따라서 무인텔 업주 등은 종사자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2016. 12. 20. 개정 공포, '17. 6. 21. 시행

- 기존에도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 행위는 금지되어 왔으나, 지난 7월 종사자 배치 및 설비 구비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무인텔 숙박업소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 청소년쉼터(119→123개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2개→224개소)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1,066→1,146명)도 확대된다.

⑤ 여성가족부 예산

□ 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일반회계 및 기금)은 7,122억 원으로 올해 6,461억 원 대비 661억 원(전년대비 10.2%)이 늘어났다.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1억 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58억 원, 아이돌봄지원 40억 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30억 원, 부모교육 27억 원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증액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17.1월부터 시행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7) -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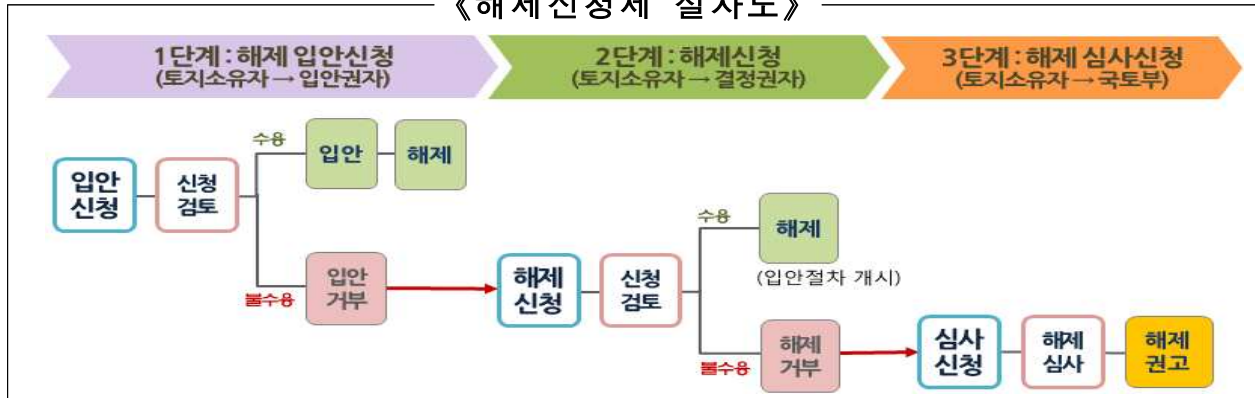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7)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15.8.11.공포, '17.1.1.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지난 10월 입법예고('16.10.18.~'16.11.28.) 등을 거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 >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17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해제신청제 절차도》



- (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하여야 한다.
- (2단계) 토지소유자는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 (3단계)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참고로,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여야 하는 집행계획은 관련 지자체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 소유 토지의 집행계획 수립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 현재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군계

확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인 설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등 다양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여건변화 등이 발생해도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있어,

-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용도지구 정비 기준을 신설하였다.

□ 아울러,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는 조례로 정한 모든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17.1.1.)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되었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되어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명절 앞두고 정부 비축 수산물 7,200톤 방출**- 주요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명태조기 등 10~30% 싸게 구입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설을 맞이하여 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월 4일(수)부터 1월 26일(목)까지 23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한다.

방출량은 명태 4,195톤, 고등어 1,717톤, 조기 175톤, 갈치 520톤, 삼치 527톤 등 총 7,200여 톤이다. 다만, 동 기간 동안 일부 품목의 생산이 급증할 경우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소비자 물가 안정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출 수산물은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방출하는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공급하므로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10~30%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 고등어(약 300g) 700원(시중가격 대비 30%↓), 명태(약 600g): 1,500원(20%↓), 갈치(약 300g): 6,000원(25%↓), 조기(약 90g): 2,300원(15%↓), 삼치(약 600g): 2,300원(18%↓), 마른멸치(1.5kg): 19,000원 (15%↓) 등

한편, 해양수산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자금을 지원 받아 수협중앙회·회원조합·민간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산물 약 12,000톤*의 설 전 방출도 독려하여 설 성수기 수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명태 4,000톤, 고등어 2,000톤, 오징어 1,924톤, 조기 1,000톤, 갈치 400톤, 기타 3,000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판매량이 증가하는 설 명절에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파는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우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편안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비축 수산물의 방출 가격을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정했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정부비축 수산물 판매처 현황

□ 대형유통업체

업 체 명	대표전화	업 체 명	대표전화
롯데마트	02-2145-8379	(주)농협유통	02-3498-1122
롯데슈퍼	02-2290-5813	(주)수협유통	02-405-8354
홈플러스	02-3459-8000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02-3459-8350
이마트에브리데이	02-380-5056	GS리테일	02-2006-2888
이 마 트	02-380-5128		

□ 전통시장 : 30개소

지역	시장명	연락처(상인회)	지역	시장명	연락처(상인회)
서울	장위전통시장	070-7799-9129	대전	문창시장	042-272-8903
서울	영등포전통시장	02-2634-1308	대전	역전시장	042-284-3655
서울	영일시장	02-2633-9047	대전	한민시장	042-522-9094
경기	경안시장	031-761-2800	대전	도마큰시장	042-531-8889
경기	통북시장	031-658-0489	대전	중리시장	042-623-1040
경기	송북시장	031-662-3368	충남	장항시장	041-957-0435
경기	동두천중앙시장	031-861-6938	충남	논산화지중앙시장	041-735-3311
경기	서정리전통시장	031-666-4676	전북	익산구시장	063-855-7795
경기	성남하대원도매시장	031-721-5522	전북	군산수산물센터	063-442-4822
경기	안양남부시장	031-449-7400	전북	군산공설시장	063-445-4929
인천	진흥종합시장	032-502-8874	전북	군산신영시장	070-7788-3412
인천	옥련시장	032-831-8640	전북	오수시장	063-644-2007
인천	구월도매시장	032-202-8982	광주	양동수산물시장	062-361-5253
인천	인천종합어시장	032-888-4241	전남	목포자유시장	061-245-1615
경북	죽도농수산물시장	054-247-7888	전남	순천역전시장	061-744-0272